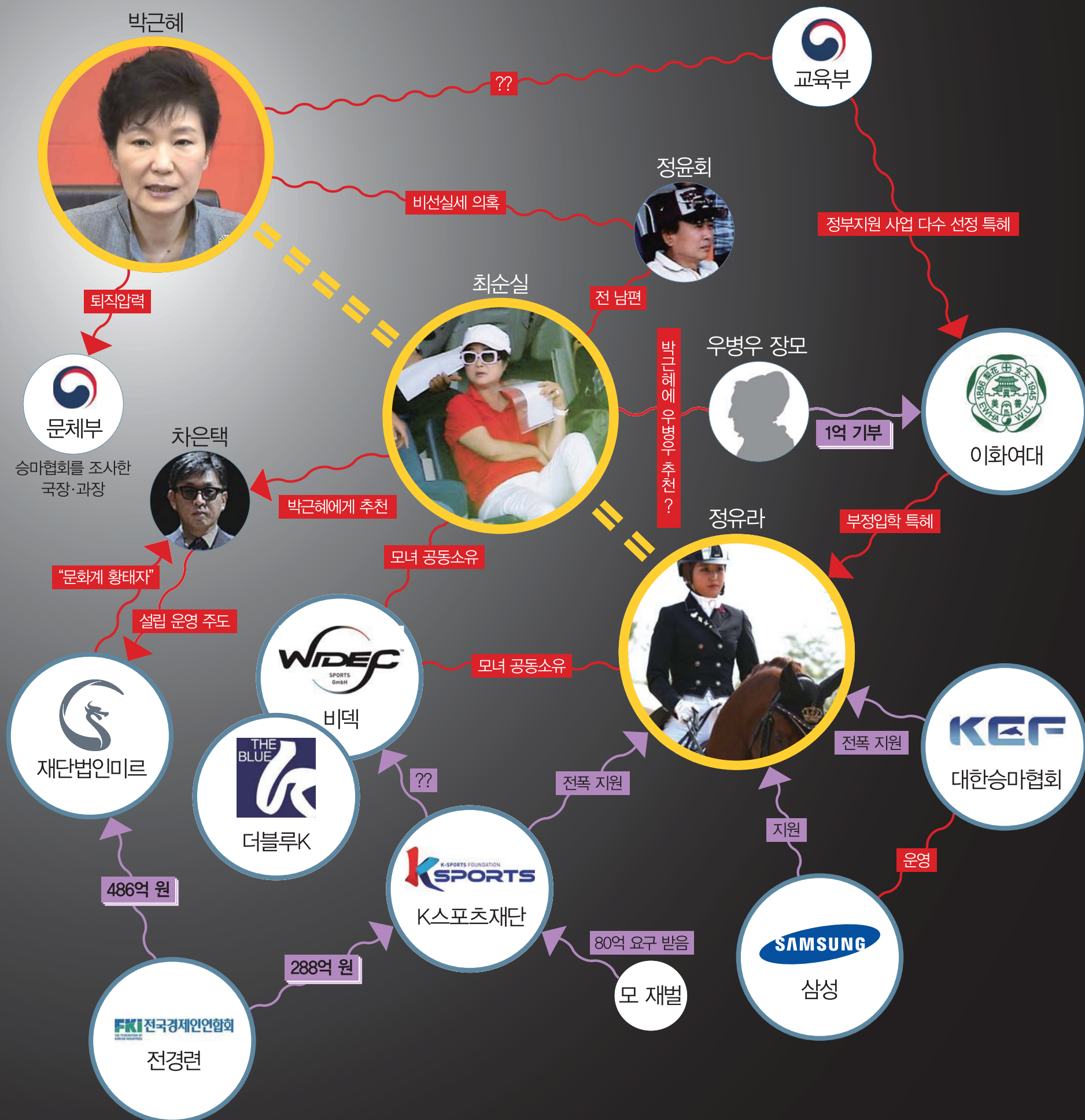




썩어버바진 시궁창 막근혜 정부

관련 기사 3면

철도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

8~9면

이화여대·서울대
학생 투쟁

2면

한국 경제 위기와 조선업 대량해고, 한진해운 사태

유럽 정치
양극화와
브렉시트

12, 13, 14면

낙태는 권리다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

알렉스 캘리니코스
러시아의 부상과
시리아

가짜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민중과 노동자 투쟁

11면

정유라 특혜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분노하다

최순실 딸

최경희 총장은 사퇴 해야 한다

양효영 이화여대 학생,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회원

최순실 딸 정유라가 부정입학 등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정유라가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고, 실소를 자아내는 리포트를 내고도 학점을 받는 동안, 평범한 학생들은 밤을 새어 시험공부를 하고 과제를 내고, 채플 시간에 1분이라도 늦을까 봐 지하철역에서부터 전력 질주했다.

최근 정유라가 수강신청을 한 컬러플래닝 수업을 들었던 한 16학번 학생의 폭로 대자보는 학생들의 이런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다른 학생들은] 단순히 수많은 밤을 샌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출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니다… 정유라 씨는 어떻게 수업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최소 B 이상을 챙겨갈 수 있나요?”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권력자 특혜 비리가 벌어진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입학하고, 교칙을 고쳐서까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기억될 편이다. 이런 사례가 단지 정유라만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의류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1백40명도 특혜를 준 교수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학비리 의혹과 연관된 남궁곤 입학처장이 강의를 하는 강의실 필판에는 금메달 그림이 그려지



참을 수 없다 10월 17일 특혜 의혹 '해명' 간담회장 앞에서 벌어진 총장 퇴진 시위.

고, 문은 학생들이 쓴 글귀로 도배됐다.

이화여대 교수들도 최경희 총장이 학사를 “문란”하게 했으며 사상 최초로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사안의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최경희 총장은 10월 17일 '해명' 간담회에서 “특혜라는 건 전혀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다. 사퇴 의사도 없다고 했다. 그간의 의혹만 하더라도 최경희 총장은 몇 번 해임돼도 모자랄 것이다.

학생 · 교수들의 분노로 들쭉이는 지

금, 운동을 확대하고 더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논의 ·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더 강력히

이런 취지에 공감한 일부 학생들이 모여 10월 17일부터 '학생총회 소집' 요청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학생회칙은 '재학생 2백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총학생회가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제1절 6조 2항). '학생총회 소집을 바라는 학생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점거의 확대 ·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 방침을 학생총회 안건으로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분노는 서명 운동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명 운동은 겨우 두 시간 만에 학생총회 소집 요건인 2백 명을 넘겼다.

그런데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하며 “운동권” 배제를 밀어붙여 온 일부 학

생들은 서명 운동을 왜곡하며 방해하고 있다. 이 운동에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소속 학생들이 적극 참가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학생들은 서명 운동 부스 주변에서 서명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친다. 또, 이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자신의 것인 양 몰래 지웠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기발한 생각이라며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강의실에서 서명판이 더는 돌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로챘다는 글도 올라왔다. 실제로 강의실에서 서명판이 없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학생총회 소집을 바라는 학생들'이 서명을 경찰에 유출시킬 것처럼 두려움을 부추기는 황당한 주장도 나온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은 지독히 비민주적인 행위이다.

이 운동을 특정 단체만의 운동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총회 소집을 지지해서 서명한 많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학생들의 항의를 더 강력히 결집시켜야 할 때 총회 발의를 방해하는 일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운동에서 정치 단체 배제하기라는 퇴행적인 공상에 집착해 운동의 대의를 저버리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정유라 특혜 의혹 규명과 최경희 총장 해임을 위해 강력한 행동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회 발의 운동에 더 많은 학생들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대 본부 점거

비민주적·친기업적 시흥캠퍼스 추진 철회 투쟁 지지한다

서울대 학생들이 경기도 시흥시에 제2캠퍼스('시흥캠퍼스')를 짓는 계획에 반대해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10월 10일 열린 학생총회에는 정족수를 훌쩍 넘긴 2천 명이 참가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요구와 이를 위한 본부 점거를 결의했다. 즉각 본부 점거에 들어간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추진 중단을 위해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점거에 들어가자 우파 언론들은 이 투쟁을 왜곡하고 있다. “서울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조선일보〉 2016년 10월 12일치).

친일과 군사독재를 미화하며 1백년 가까이 특권을 누려 온 〈조선일보〉가 특권 운운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최근에는 〈조선일보〉주필 송희영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여행을 제공받은 것으로 폭로돼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10월 17일 본부 앞 시위.

다. 서울 소재 대학이 만든 지방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 비해 차별을 당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학교 당국이 서울 본교에 비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캠퍼스 소속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나빠진다.

이런 차별을 조장해 온 것은 지배자들이었다. 특히, 그들이 강요해 온

경쟁 논리 때문에 학벌주의가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로 대학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차별을 만들어 온 자들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특권'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물론 차별과 사회적 편견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차별을 겪을 게 뻔한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것과, 차별을 당연시하고 강화하려 하는 '특권 의식'은 완전히 다르다.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점거 투쟁에 나선 평범한 서울대 학생들은 후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몰래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뒤통수를 때렸다. 얼마나 숨기고 싶었으면 그 흔한 협약 체결식도 하지 않았다. 의무기숙제도도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지만, 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는 사이 한라건설은 들어오지도 않은 서울대 이름을 팔아 아파트 분양을 성공리에 마쳤고, 시흥시는 '서울대학로'를 만들었다. 당연히 주변 집값과 땅값이 들쭉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투기꾼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서울대 당국은 이렇게 한라건설이 부동산 수입으로 번 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게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의 처지에선 학생 수천 명을 보내는 대신 돈 거래가 오가는 그림이 선명히 그려진다. 이들이 “대학이 학생들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시흥캠퍼스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단지”로 만들겠다며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운영비도 '산학협력'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다. 대학 운영이 기업의 이윤 동기에 종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대학에 기업의 입김이 커질수록 학문이 왜곡되고 구성원들의 처지가 더 악화됨은 지난 5년간 법인화된 서울대가 보여 줬다. 특히, 수십만 평이나 되는 캠퍼스를 기업의 방침에 의존해 운영한다면, 불안정한 시장 상황 때

문에 결국 재정 부담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법인화 이전 5년보다 이후 5년 동안 교단을 떠난 전임 교수는 41퍼센트나 늘었다.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법인화 직후인 2012년부터 매년 1백여 명씩 늘어 왔다. 음대 시간강사 해고 문제, 비 학생 조교 기간제법 위반 문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문제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교직원의 처지는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학내 민주주의도 후퇴해, 가령 총장직선제도 폐지됐다.

비민주적이고 친기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캠퍼스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점거 농성이 강화돼야 한다. 학생회 선거도 이에 맞춰져야 한다.

〈노동자 연대〉신문 편집팀
(장호중·정선영이 대표 집필)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김문성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알궃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데’ 하는 의혹만 키웠다.

그렇게 해서 최순실을 고리로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 정유라와 차은택,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재단은 각각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조 문화·스포츠 산업에 대한 기여를 표방했다. 즉, 박근혜의 임기 말과 퇴임 후의 치적 **홍보용** 성격이 큰 것이다.

이 재단에 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보름 만에 8백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건어왔다. 친기업 정책 추진에 다걸기 하는 정부에 기업주들이 ‘성의’를 보인 것이다.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과 정책기획수석 안종범이 모금의 주체였고, 최순실이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단 설립을 총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26일 설립신고를 한 미르재단의 설립 실무는 차은택 쪽이 맡았다. 그는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천거해 2014년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2014년 8월 차은택이 몸담은 회사의 대표였던 김종덕이 문화체육부장관이 됐고, 12월에 외삼촌인 김상률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됐다. 차은택 본인도 올해 초까지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을 지냈다.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자리에는 차은택과 함께 영상

홍보회사를 운영했던 인물이 앉았다.

올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는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센터 사장이 초대 이사장이 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더 많은 것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승마선수이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는 올해 초부터 독일에서 장기 해외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단 일행의 숙소와 훈련장 등 체류 관련 실무를 K스포츠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이 재단의 첫 업무였던 셈이다. 이들은 20실 규모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쓰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K스포츠재단이 국내 모 재벌에게 80억 원을 비인기 종목 도쿄올림픽 유망주 지원 명목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재단은 독일에서 비택이라는 회사를 통해 선수를 관리하겠다고 했고, 이 비택은 독일 현지 법인으로 최서원(최순실)과 정유라가 공동 지분을 가진 회사라는 것이다. 이젠 **스포츠 투자를 빚자한 재산 해외 도피 의혹**까지 생긴 것이다. (이 기사를 인쇄소로 넘길 시점에 한국과 독일에 더블루K라는 최순실 소유의 또 다른 K스포츠 재단 연계 기업이 폭로됐다. 독일의 더블루K는 비택과 주소지가 같다고 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결국 정유라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결 고리가 돼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유라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했다. 정유라의 체육특기생 입학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이었다. 그러나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총장에게 박근혜와 최순실, 정유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하는(“지금 누구의 딸이 우리 대학에 지원했다!”) 특별한 과정을 거친 뒤



“웬만하면 비추함” 말도 안 되는 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다.

에 무난히 합격했다.

정유라가 학교를 안 나가서 학점 받기가 어렵자, 학칙을 바꿔 해외 훈련과 대회 출전 계획을 미리 내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러나 올해 4월에 정유라가 냈다고 이화여대 당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계획표에는 올해 9월 시험의 ‘결과’까지 표시돼 있었다. 4월에 서류를 낸 것처럼 조작하다가 실수한 듯하다. 오죽하면 입학부터 학점까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이런 대가로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

대한승마협회가 마치 정유라의 매니지먼트 회사처럼 정유라를 특별 관리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승마협회의 협회장을 비롯한 핵심 집행부는 모두 삼성전자 임원들이다. 이들은 최유라의 독일 훈련 비용을 승마협회 공식 사업비로 지출하려 했고, 국가대

표 감독을 보내어 개인교습을 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승마협회의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프로젝트로 포장됐다.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명마를 정유라에게 선물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청와대와 교육부, 전경련과 삼성, 이화여대, 일부 예술계·스포츠계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표면적 중심에 정유라가 있는 셈이다. 그 정유라와 박근혜를 잇는 고리가 어머니인 최순실이니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의 특별한 관계가 이 엄청난 권력형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실제로 부각된 정윤희(전 남편), 우병우(추천), 차은택(추천) 등 모두 최순실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최순실은 박근혜가 1970년대 청와대 시절 멘토처럼 따랐다는 최태민의 딸이다. 최순실은 그 시절부터 40년간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통령 취임식 등 중요 행

사에 박근혜가 입을 한복과 보석류까지 최순실이 골라 주고, 최순실이 추천한 개인 트레이너를 청와대의 고위직에 임명할 정도로 둘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업주들이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받으려 한 것이든, 딸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시나리오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것이든, 권력자가 둘 다 이용하다 들킨 것이든, 그 본질은 같다.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동원된 전형적인 권력형 특권층 부패인 것이다.

물론 공식 직책도 없는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가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독재 정권들은 물론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임기 말에 대통령의 아들 또는 형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가 드러나 정권이 약화됐다.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부패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 준 것

최순실 게이트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정경유착 실상을 확실히 보여 줬다. 박근혜 측근들이 운영한 ‘들보잡’ 재단을 위해 재벌들이 보름 만에 1천억 원 가까운 돈을 냈다. 삼성이 맡고 있는 대한승마협회는 마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매니지먼트 소속사처럼 움직였다. 기업화된 대학(이화여대)도 이 대열에 끼었다. 이런 ‘자발적’ 지원과 헌납은 정권의 압박 탓도 있겠지만, 주로 노동 개악,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각종 정부 사업에서의 특혜 등을 바라는 대가성이다.

둘째,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과 부패한 인적 기반을 드러냈다. 박근혜의 권력 독점적 통치 스타일 탓에 잘 드러나지도 않은 민간인 ‘비선 실세’가 박근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 왔다. 사진 몇 장 말고는 언론조차 어디 사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비선 실세’, ‘회

장님’이라는 별칭으로 전횡을 휘둘러 온 것이다.(<itbc>는 최순실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면서, 본인 목소리를 비교·확증할 근거가 없어서 인용 보도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런 비밀스런 실세 가족을 위해 정부와 공적 기관들, 재벌이 움직였다.

결국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시간에 사라져 놓고는 ‘사생활이니 묻지 말라’는 적반하장도 이처럼 권력을 사유물처럼 다뤄 온 특권층 DNA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역겨운 일이다.

셋째, 아군인 <조선일보>가 이런 비리를 캐려 한 것은 여권 내부의 균열을 보여 줬다. <조선일보>가 꼬리 내린 뒤 <한겨레>가 폭로를 이어간 것도 시사적이다. 정보원이 건재한 것은 여권 내 균열이 봉합된 게 아니라는 뜻이었

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새누리당의 ‘꼴통 친박’ 김진태 등을 빼고 기소했다. 선관위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도 권력 이완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

행복 끝, 레임덕 시작

정권의 비밀스런 추문이 터져나오고 부패 폭로가 순식간에 박근혜의 턱 밑까지 치달은 것은 실로 심각한 위기의 징후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정치자금을 헌납한 것을 두고 경총 회장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돈을 뜯어낸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사적이다. 기업주 대표의 이런 냉소적 반응은 심중팔구 (측근 실세까지 챙겨주며) 이 정부와 정경유착을 한 대가가 시원찮아서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려고 대우조선과 롯데 등을 뒤졌으나, 자신의 부패도 함께 폭로됐



“해도해도 안되는 망할새끼들” 비밀스런 권력의 부패 복마전은 정경유착의 실상을 보여 준다.

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도 못했는데, 박근혜는 더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까지 했을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도 최근 폭락했다. 19~40대에서 지지율은 10퍼센트대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다. 이런 지지율 폭락에는 경제 실패 등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감과 염증이 근본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증폭시킨 것은 9월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공공 부문 노동자 파업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11월 12일 대규모 민중총궐기도 예정돼 있다.

상처입은 야수가 사납듯이, 그럴수록 박근혜는 노동자 투쟁에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노동운동은 위축되지 말고 박근혜의 취약성을 이용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까요?

“성공한 기업인들이 공직에 더 많
이 진출하는 것을 보고 싶다.”

부자들의 친구 힐러리 클린턴의 본심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
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
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온통 시커
멧게 타들어가는 심정 ... 노동개
혁해야”

박근혜, 고양이 쥐 생각하는 척하더니
‘노동개혁’이 본심

“해도해도 안되는 망할새끼들에게
쓰는 수법. 웬만하면 비추함”
“운동전 몸을스트레칭하기에도 좋
고 운동후 뭉 초노몸을풀기에도
좋습니다.”
“마장마술은 1시간의 몸풀기후 시
합이 시자과는네 이때체력적으
로 받쳐주지못하면 시합을잘치르지
못학됩니다. 좋은비구력을가지면
2마리 3마리 경기를뒀 수 있고 경
험많은선수는 성장합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B학점을 받은
오타투성이 리포트, 이쯤 되면 창조학점

“앗!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다
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라에게 자료 첨부 부탁하는
공손한 담당 교수

“세상에나 마(馬)상에나”
이화여대 학생들의 기막힌 심정

“서울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으로 의무기록을 입수했지만
317일간 작성된 6천 장에 달하는
기록이 방대해 감정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검이 필
요하다”

고(故) 백남기 씨 부검 주장하는
국과수의 궤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

“답변하지마!”

KBS 사장 고대영,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보도 삭제 의혹에
보도본부장이 대답하려 하자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화물연대 파업 10월 17일 집회
최대 규모로 모여 부산 신항 물류를
멈추며 투쟁하다
- ★ 성, 사랑, 그리고 가족 기획연재①
가족은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의 산
물이다
- ★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 ★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 ★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에 맞선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투
쟁에 지지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를 처벌하라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 한 달 가
까이 지났는데도 정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검을 강요하고 있
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사망의 과학
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불
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많은 증인, 당
시 상황을 담은 수많은 영상과 사진,
3백14일 동안 서울대병원이 실시한
CT·MRI 검사 등 상세한 의무기록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경찰조차 “물
대포에 의한 외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
준 정책국장은 “법의학 교과서에도 백
남기 농민과 같은 경우 부검이 필요 없
음을 명기한다”며 정부의 부검 시도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수 언론은 국가 폭력에 대한 분노를
돌리기 위해 집회 참가자의 폭행에 의
한 사망 의혹을 제기한다.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뉴스
를 뉴스로 뒀기’ 수법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그 결과가 대중적 불신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20퍼센트대로 떨어
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영장 집행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금 백남기투쟁
본부는 부검 영장의 효력이 만료되는
10월 25일까지 장례식장 지키기에 주
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 동



10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의를 전제로 한 부검 영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한데다가 철도·화물 노동자들
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부가 강제 부검을 위해 시신을 탈취하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중총궐기

정부가 나서서 부검 논란을 일으키
며 쟁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것
에 맞서 백남기투쟁본부와 유가족이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더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
고 새누리당 눈치를 보며 법사위로 넘
겼다. 법사위는 새누리당이 다수라 상
설특검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더민주당은 세월
호특별법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유가족
앞에서 특검 추진을 약속해 놓고는 뒤
통수를 친 것이다. 여기서도 더민주당
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아인을 제물 삼아 힘겨루기 중인 제국주의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시리아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살을 주식으로 삼는 흉측한 괴
물과도 같다. 이 전쟁은 바샤르 알
아사드가 민중의 혁명적 운동을 무
력으로 짓밟으려 한 데서 촉발됐고,
혁명 운동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
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시리아
에서 더 지배적인 양상은 제국주의
열강과 그 동맹, 열강에 의존하는 현
지 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각축전
이다. 아직도 시리아에서 전쟁이 멈
추지 않는 이유는 각축전에 뛰어든
모든 세력에게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1년여 전 러시아가 전쟁에 뛰어들
면서 전세가 크게 변했다. 가장 중요
한 변화는 러시아 덕분에 아사드 정
권이 다시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제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습] 지원 아래 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 알레포를 탈환하려고 한다.

각 세력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해 11월 터키는 러시
아 전투기를 격추한 바 있다. 하지만
특히 7월 터키에서 실패한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터키와 러시아는 가까
워졌다. 8월 말에 터키 군대는 시리
아 영토 깊숙이 진격했다.

현재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머
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한 가지다.
시리아에서 일정 지역을 차지한 쿠
르드 민족주의 세력이 터키 내 쿠르
드인들과 연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
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
음과 같이 보도했다. “전에 러시아
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세력을 일
시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지원했는
데, 이제는 터키더러 그들을 마음껏
공격해도 된다고 청신호를 보냈다.”

이처럼 쿠르드인들이 러시아한테
토사구팽당한 것은 러시아 역시 미
국과 다를 바 없는 제국주의 세력임
을 보여 준다. 러시아가 시리아 개입
을 통해 일차적으로 이루려는 것은
이런 것인 듯하다. [2014년] 우크라
이나 사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방
이 러시아에 가하는 경제 제재를 포
기하고,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러시
아를 주요 중재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

지금까지만 보면 러시아 뜻대로
되지는 않고 있다. 쫓았던 시리아 휴

전이 9월에 끝나자 서방은 더한층
호전적 언사를 내뿜고 있다. 영국 외
무장관 보리스 존슨은 지난주 하원
에서 서방 외무장관들이 런던에 모
여 “더 역동적이고 군사적인 옵션”을
의논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는 자신이 처
칠처럼 강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알맹이는 크
지 않다. 총리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군사 행동을 벌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방이 시리아를
놓고 어떤 행동을 벌일지는 런던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결정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서방이 시리아
에서 대대적인 군사적 개입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는 중동 수렁
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
다는 의향을 분명히 했다. 그 때문에
[시리아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해야
하는 국무장관 존 케리가 사용할 카
드가 줄어들었다. 오바마의 눈으로
중동을 볼 때 지금은 이라크 도시 모
술을 아이시스한테서 탈환하는 군사
작전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바마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 후 지금
보다 더 호전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
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그럼에
도 미국과 러시아는 마치 냉전 시기
에 그랬듯 계속 복잡한 전략적 계산

사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살해
됐음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책임자로
지목된 전 경찰청장 김진명은 처벌돼
야 마땅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수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살인’ 물대포 사용에
대한 분노는 매우 높고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최근 백남기 추모대회에서 민주노
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철도·화물 노동자들의
파업과 “살인 정권에 책임을 묻는 투
쟁”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가족인 백도라지 씨도 “정부의 성과연
봉제 추진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노
동자들도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과
국가 폭력 재발 방지”에 함께해 달라
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유가족의 요
구를 받아 ‘책임자 처벌과 특검 실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고 있다. 노동개
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살인 진압 책
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 결합되
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영준

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다시 말해,
직접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다. 인류
전체를 끝날날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언론은 그런 충돌이 벌
어질 가능성을 떠들고 있다. 싱크탱
크 <스트랫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러시아가 “(미국과) 여러 전장에서
대결에 직면”한다고 썼다. 그러나 러
시아의 경제적·군사적 힘은 여전히
옛 소련에 견줘 훨씬 작다.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울 가장 좋은 방법은 중
국과 틈을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두
나라는 공동 군사 훈련을 벌이기 시
작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대로 하자
면 러시아는 중국에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은 시리아에서 전
면전을 원치 않는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냉전 시기에도
1961년 베를린, 1962년 쿠바를 놓
고 그랬듯이 지역적 분쟁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보리스 존슨이 주장하는 시
리아 비행금지구역 선포가 실제로
실행돼 러시아와의 충돌이 벌어지면
서 말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외세가
모두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하는 수
많은 이유 중 하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26호 / 번역 김종환

강남역 살인 사건 판결에 부쳐

비극의 근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현주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판사 유남근)는 ‘강남역 살인’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5월 김 씨는 강남역 근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 나라 최대 변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에게 행해진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범행의 잔혹함을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김 씨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게 이해가 간다. 김 씨가 범행 이후에 보인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들(“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다”는 등)은 사람들이 더 분개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노동자 연대>는 이 사건이 정신적·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한 인간이 자신보다 만만한 상대에게 저지른 무차별 대상 범죄라고 봤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 개인적 요인들이 결합돼 일어나지만 그 근원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가 있다고 봤다. 김 씨가 범행 당시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하지만(대부분의 살인은 증오심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위이다), 이런 감정은 피해망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 자체가 근본 동기로 작용한 ‘혐오 범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무차별적

1심 재판부 판결은 범행 당시와 그 전의 김 씨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와 생활조건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가 시작

돼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9년경 강박장애 진단을, 2005년경에는 신경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이른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김 씨는 총 여섯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는 곳의 공동현관문을 깨뜨리거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2층에 살면서 4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수차례 항의하다 경찰의 신고를 당하는 일 등을 계기로 가족이 입원치료를 시켰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씻지 않고 “망상적 사고와 환청을 듣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퇴원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의 재발·악화가 반복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 씨는 다니던 신학대에서 결국 제적됐고, 위생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문제로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그만두게 되는 등 사회생활도 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피해망상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재판부는 그를 진료한 의사와 감정인의 의견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며, 범행 당시에도 김 씨가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가령 올해 1월경까지 김 씨를 진료했던 담당의는 ‘퇴원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당시 망상적 사고 증상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남성을 무서워해서이지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오랫동안 매우 엄한 아버지 하에서 자랐고,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고 아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의 결과라고 판결했다.

버지와 함께 사는 것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렇듯 김 씨의 여러 조건과 상태들을 따져, 김 씨가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내린 것은 세밀한 심사숙고의 결과로 보인다. 김 씨는 대부분의 진정된 조현병자가 수치심에서 그러하듯 재판 내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일반인과 같고 정신분열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책임성 문제에서 심신미약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일부 양성분리적 여성주의자들처럼 ‘여성혐오’를 매우 느슨하게 규정하면 여성을 만만하게 본 것도 ‘여성혐오’이므로 그 논리대로라면 이 범죄도 ‘여성혐오 범죄’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 차별의 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느슨한 규정은 무차별 대상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를 설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무차별 살인은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혐오’를 이렇게 느슨하게 쓰는 것은 진짜 혐오 범죄를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봐야 하는 것이다.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해서 ‘여성혐오’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흉악 범죄 사례들을 보면, 그 대상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2007년 시애틀에서 정신질환에 시달린 한 여성은 여섯살 난 자신의 아이를 익사시켰다.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아동이 살해됐다고 해서 이 사건이 ‘아동혐오’ 사건인 것은 아니다.

소외

김 씨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 연인, 동료였을 한 무고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치료될 때까지 마땅히 장기 구금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가 근원에 있는 비극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소외란 외로운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지 못하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 물론 소외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이들이 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무차별 범죄에는 개인적 성향과 경험, 계기들이 결합돼 있다. 따라서 사건을 구체적으로 봐야지 어느 하나로 환원해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비극의 뿌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비극의 근원에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근본 분열을 남 대 여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런 관점은 강남역 살인과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개인들끼리의 갈등이 해법인 듯한 오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법은 여성 차별이 남성 집단(의 사실상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한다고 오해한다. 이런 인식이 차별적 경험을 반영한 것일지라도, 이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래서 차별에서 체제가 하는 구실을 간과하고 그것에 맞서는 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 —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힘) — 을 채택하지 못하게 한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운동이 몇몇 의미 있는 법·제도적 개혁을 성취했음에도 주변적 운동에 머물러 온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여성 차별을 상당히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없애려면 차별의 현실에 분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혁할 해방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5면에서 이어짐

폴란드 낙태권 운동의 경험에서 배우기

최근 한국의 낙태권 운동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참가한 것은 이 운동이 폴란드의 낙태권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폴란드의 사례는 여러 모로 한국의 낙태권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낙태가 불법인 폴란드의 상황은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의 여러 나라들보다 한국의 상황과 더 유사하다.(물론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도 낙태권 제약 시도가 종종 벌어져 낙태권 운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폴란드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 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20년 동안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낙태는 살인”이라는 관념을 주입해 온 매우 보수적인 나라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인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에 따르면, 그동안 폴란드에서는 교회와 우파의 공세로 낙태권 요구

운동이 수세에 몰려 있었고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이토록 보수적인 가톨릭 나라에서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낙태권 운동이 터져나와 마침내 가톨릭계 정당인 집권당의 반동적 시도가 좌절됐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폴란드 대중의 자신감은 더 커졌다. 이제 시위대의 주장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자유주의적 야당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의 요구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낙태가 불법화된 한국에서도 폴란드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또한 한국의 여성운동이 우파의 공세적 태도에 위축돼, 생명권 논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며 낙태 합법화 요구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도 보여 준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거리의 대중 행동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참을 강조하는 구실을 했다.

10월에 열린 폴란드의 대규모 낙태권 시위는 그곳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폴란드에서 벌어진 시위의 연장선 상에 있다.” 낙태권 시위에서는 많은 여성단체들과 함

께 좌파 정당 라젠(“함께”라는 뜻)이 능동적 구실을 했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라젠은 다음 선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거리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는 데 더 주력해 왔다. 전국노동조

합동맹(OPZZ)와 교사노조인 ZNP(폴란드 최대 단일노조)가 낙태권 시위 지지를 표방하고, 조합원들의 시위 참가를 독려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것은 10월 시위에서뿐 아니라 향후 폴란드 낙태권 운동의 전망에 더욱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낙태권 운동에 대거 동참할 때 낙태 합법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노동자민주주의’는 거리 대중 행동의 중요성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참을 강조하는 구실을 했다. 가령 교사노조의 노동조건 방어 집회에서 낙태권 시위를 헤드라인으로 하는 신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의 낙태권 운동에서도 점차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과 노동조합의 동참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반기문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김지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는 법이 없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서에서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는 반기문을 두고 “미국인과 미국의 가치, 미국 정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이라 평가했다. 정말로 미국이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반기문이 있었다.

2006년 당시 미국의 대(對)중동 전략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 답례로 미국은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하도록 적극 밀어줬다. 당시 버시바우가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평했을 만큼, 그는 철저히 친미적 인물이었다. 반기문은 취임 당시 “모두의 의견을 들어 편파적이지 않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내내 친미적 태도로 일관했다.

2007년 이라크 후세인 처형을 두고 “각국이 판단할 일”이라며 사실상 사형을 옹호했다.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유엔 조사위원회가 2008~09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찾아냈지만 반기문은 보고서 내용을 축소시켰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가 반기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건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실탄·수류탄을 쓰고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겨우 돌로 맞았는데도 반기문은 ‘양측’ 폭력 자제를 요구했다. 반기문의 ‘중재’는 실상 이스라엘의 책임을 흐렸다.

그래서 2012년 반기문은 가자지구 방문 중에 “반기문,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는 충분하다”고 외치는 시위대와 마주해야 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반기문에게 신발을 던졌다. 이라크 기자가 부시에게 신발을 던진 일을 연상케 하는 일이었다.

2011년 아랍혁명의 일환으로 리비아에서도 혁명군이 카다피 정부



사진 출처: 미 정부

지배자들의 충실한 ‘사무장’ 〈이코노미스트〉 “미국이 반기문을 대략 자기 사람이라고 간주한다”고 평했다.

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서방은 이 지역에서의 석유 산업의 이권 보장과 아랍 혁명 확산 차단에 골몰했다. 반기문은 이제껏 한 번도 채택된 적 없던 “보호 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을 적극 지지했다. R2P는 인도주의를 구실로 한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서방은 리비아 공습의 명분을 마련하게 됐다. 반기문은 이때도 오바마를 긴급히 만나서 “리비아 상황에는 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2013년 반기문은 유엔의 승인 없는 시리아 공격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2014년 9월 22일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고서 이를 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사실상 공습을 두둔했다.

“지나치게 편파적”

한편, 반기문은 “인권 우선”을 앞세우고,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지만 실제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

올해 1월 반기문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 할머니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때, 박근혜에게 전화를 걸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면서 “한일 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춰 이번 협상

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추어줬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서 있는 언사였다.

올해 6월에 반기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력에 굴복해 그 나라를 아랍인 권침해국 명단에서 빼 버렸고, 지난해에도 ‘분쟁지역 어린이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을 제외시켰다. 유엔 평화유지군 자신이 아프리카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반기문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임기 말이 돼서야 비판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반기문은 국제연습스티가 한국의 인권 후퇴를 경고하는데도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 왔다.

반기문이 스스로 치적으로 꼽는 파리 기후협약 체결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 협약으로는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반기문은 ‘세계 대통령’은커녕 미국과 제국주의 열강들을 위해 충실히 일하는 자였을 뿐이다. 미국이 반기문의 UN 사무총장 재임 길을 터 줬던 것도, 새누리당이 반기문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진 출처: UN Photo

제국주의 점령을 도와 온 유엔 평화유지군.

반동적 전력

● 반기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래서 ‘파병반대국 민행동’ 등 반전 운동 세력은 반기문을 “파병 5적”으로 꼽았다. “한국인이 납치되더라도 파병 계획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던 반기문은 실제로 2004년 김선일 씨가 피랍됐는데도 “국민도 정신 차리고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파병 계획을 고수해 사실상 살해를 방조했다.

● 2002년 외교본부 대사 시절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국 후원하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MD에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에 시작된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도 반기문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미군이 용산기지 철화 비용의 극히 일부(5억 1천5백만 달러 중 2백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하자 국내 반발을 우려한 정부 관료들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던 반기문은 환경부장관에게 압박을 넣으며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 반기문은 민영화를 확대할 한미FTA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무역 자유화의 첨경이자 세계적 대세인 FTA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 신자유주의 의제를 확대해 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회의를 2005년 부산에서 열 때도 반기문은 “대테러의 지 재확인”을 강조했는데 이는 미국 동맹국들의 이라크 전쟁 참여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반기문이 198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동향’을(알려진 것만) 두 번 전두환 정부에 보고했던 전력이 올해 폭로됐다. 반기문은 외교부 참사관으로 연수생이라 보고 의무가 없는데도 열심이었다.

유엔은 결코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다

유엔은 “인권”, “평화”를 입에 달고 살지만 결코 세계 평화를 위한 중립적 기구가 아니다.

유엔은 그 탄생부터 제2차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 기구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영구적·절

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섯 상임국가 —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 아랍로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일삼고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유엔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벌이는 전쟁과 범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2011년 이스라엘로부터 강제 이주

와 학살을 동반하는 서안지구 재배치 계획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엔은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후 이라크를 상대로 혹독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이 경제제재로 어린이만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실시된 유엔 최대 인도주의 사업으로 알려진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에서 참여 기업 4천5백 곳 중 절반가량이 뇌물을 주고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폭로됐다. 여기에는 당시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아들도 연루돼 있었다. 콩고와 코소보 등 유엔이 참여한 곳마다 뇌물 수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유엔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 개입을 이유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돕는 구실을 해 왔다. 1992년 소말리아에 개입해 내전을 부추기고 끔찍한 살상을 저질렀고, 아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평화유지군은 아이티, 콩고, 수단 등 주둔 지역의 가난한 여

성과 아동을 상대로 먹을 거리나 일자리 등을 미끼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0년 아이티 지진 피해 직후 이 지역에서 1백 년 만에 콜레라가 창궐해 80만여 명이 감염되고 1만여 명이 사망했다. 당시 과학자와 의사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이 병을 옮겨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적 권고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이 콜레라 창궐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무려 5년이 걸렸다.

진보진영 우파가 무색하게도 노동자 계급은 고립돼 있지 않음이 입증됐다

철도 파업이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하다

이정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이 9월 하순에 시작돼 철도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수서KTX 민영화 저지 파업 때 세운 23일 동안의 파업 기록 경신이 코앞에 있다.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도 화물열차 수송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이고, 여객 열차와 수도권 전동차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늘며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을 낮출 예정이고 KTX 운행률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현대차 파업은 아쉽게도 결국 마무리됐지만, 10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들은 시름을 떨치 못했다. 정부와 우파 언론들이 '경제 위기'에 국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고 화물연대 파업에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10월 17일 부산신항에 5천여 명이 집결해 컨테이너 수송을 저지하며 힘을 과시했다.

박근혜의 핵심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최근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26퍼센트까지 떨어졌다.

한국 경제 상황도 지뢰투성이다. 수출 부진,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과열, 대우조선 구조조정 해법을 둘러싼 갈등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의 최측근 최순실과 그 딸을 둘러싼 특혜와 부정 시비가 단적으로 보여 주듯,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기주의' 끝판 정권이 노동자들을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악랄이 먹히지 않고 있다.

철도와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면 정부는 점점 곤혹스런 처지가 될 것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사측이 '2017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것은 시사적이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문제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지속하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도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관계를 애써 외면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적대가 계급 투쟁이라는 점은 점점 더 많은 소수에 게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좀처럼 물러서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양보한다면 현재의 레이더 수준을 넘어 마비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래서 또한 야3당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문제를 다룰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

자고 거듭 촉구하는데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다. 정의당만 성과연봉제를 반대할 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영부새처럼 17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법적 의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의 최측근 최순실과 그 딸을 둘러싼 특혜와 부정 시비가 단적으로 보여 주듯, 이 부패하고 타락한

초점

철도 파업은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철도 노동자들이 역대 최장의 파업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초점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가 늘고 있다. 민주노총 특별 결의에 따른 '철도노조 파업 지원' 채권 구입에 여러 노조가 적극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에도 지지 배너, 농성 물품, 투쟁 기금이 연일 모이고 있다.

이 파업들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는 듯하다. 보건의료노조의 신생 조직인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보름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고대의료원

도 임금피크제에 맞선 정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건설노조도 10월 18~19일 철도 전국 상경 집회에 맞춰 전국확대간 부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또, 노동자 투쟁은 학생들의 점거농성과 항의 운동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화여대와 서울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전투적 항의는 정부에게도 꽤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이화여대 총장 사퇴 운동은 박근혜 최측근들이

줄줄이 엮인 비리와의 직결돼 있어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지배계급도 쉽게 물러서지 않아 노동자 투쟁이 장기화하고 첨예해지곤 하는데, 이때 노동자들이 승리를 거두려면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노동자들이나 천대받는 사회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놓고 투쟁에 나서는 것도 연대 행위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그런 효과를 낸다.



파업 파리에만 혈안이 된 철도 사측의 대책 없는 대체인력 투입.

화물연대 본부장 등을 즉각 석방하라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10월 18일 경찰이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사진)을 비롯해 지부장과 조합원 등 17명을 강제 연행했다.

집회를 마치고 행진 중이던 노동자들은 방송차에서 '본부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며 항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행진 대열을 신속하게 돌려 부산 신항 삼거리로 돌려갔다. 그러나 이미 박원호 본부장 등이 경찰에 연행된 뒤였다.

연행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자들은 격양돼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폭력을 휘둘러 부상자가 속출했고 연행자도 늘어났다.

전날인 17일 집회에는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8시간 동안 가두에서 격렬하게 투쟁을 벌였다. 특히 밤 10시를 전후해 노동자들은 1시간 동안 컨테이너 운반 차량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강경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아직 파업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김종석 기자

화물연대 파업

부산 신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장우성 (부산 신항 현장에서)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야호제를 넘기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일주일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파업 여드레째인 10월 17일(월) 부산 신항 앞에서는 5천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8시간 동안 물류를 막으며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집회 시작 불과 3시간 만에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은 14파센트의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 차량의 출입이 절정에 달하는 밤 10시를 전후해 노동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1시간 동안이나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상대로, 마땅히 기업이 부담해야 할 차량할부금을 떠안고 있다. 매달 생계비 외에도 수백만 원의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처지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물동량이 꾸준히 줄어들어 이런 부담은 노동자들을 더 무겁게 짓누른다.

"매달 갚아야 하는 차 할부금이 3백만 원인데, 몇 년마다 변호관 값 수천만 원, 매달 지킬료 수십만 원을 뺐겨 10년이 지나도록 할부금을 다 갚지 못했어요. 지일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짐을 실어 나르고 손에 남는 돈이 10만 원 조금 넘으면, 힘들어도 꼭꼭 자고 한탕 더 뛰게 되요. 그래서 우리 목숨도, 도로 안전도 더 위험해지고, 그런데 정부 계획은 이런 우리더러 아예 죽으라는 거예요."

대체 수송 저지의 효과

파업 사흘째, 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던 부산 신항의 농성 대오 중



물러서지 않았다. 10월 17일 5천여 명이 부산 신항에 모여 물류 운송 저지에 나섰다.

3분의 2가 다른 거점들로 흩어졌었다. 그러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를 만에 다시 부산 신항으로 전국의 파업 대오가 집결했을 때 재집결한 노동자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대체 수송 차량을 막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였다. 그러자 파업 대열이 금세 회복돼 오히려 파업 초기보다 규모가 늘었다. 노동자 고유의 힘, 즉 '이윤에 타격을 주는 투쟁'을 벌인 것이 파업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잠시 파업에서 이탈했거나 관망하던 노동자들을 불러모았다.

투쟁이 더 단호해지자 부산 신항으로 초점이 형성돼 화물연대 파업을 지



투쟁이 단호해지면서 파업 대열이 늘고 연대로 커지고 있다.

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농성장 주변에 파업 지지

배너도 늘고, 투쟁 지원금과 농성 지원 물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17일

에 이어 19일에도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연대하는 집회가 확정됐다. 화물 노동자들의 투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늘 정말 많이 모였네요. 연대 단체들 것발도 여럿 보이구요. 싸울 맛 납니다. 이 기세로 끝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네요. 우리가 깨어나 정부가 항복하나 한 번 끝까지 싸워 바랍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투쟁의 열기는 아침까지 이어져, 부산 신항 농성장에는 '아침부터 다시 물류에 차질을 주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채근하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복귀부터 하라고 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부끄럽지 않게 싸울 것이다. 이기든 깨지든 당연히 싸울 것이다. 파업 1주일이 넘었다. 평화로운 집회로 인해 '못난 본부장'이라고 조합원들이 말한다. 성난 화물 노동자의 마음을 본부장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정부는 파국을 멈추려면 대화에 속히 나서라."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 합의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철도 투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주말까지 화물 파업이 이어진다면 자동차 제조사, 화학과 철강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천 소책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펴냄
136쪽 4,000원

구입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https://workerssolidarity.org/

철도 안전 위협하는 '대체인력' 철수시키라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 파업을 파과하라고 군인, 대학생, 퇴직자 등으로 이뤄진 대체인력 수천 명을 투입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단기 계약직 3천 명 신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철도공사는 이미 대체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한 상태라고 한다.

대체인력의 미숙함과 피로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출근길 수도권 전동차가 한 시간 이상 멈춰서고, 정차할 역을 지나치고, KTX 열차가 비상정차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정비 부실,

투입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안전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KTX 운행률을 무리하게 1백 퍼센트로 유지하고 있어 고속차량 정비가 매우 부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TBC는 대체인력 투입 후 정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기관차 강철 지부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파업이 길어지니까 차량 정비도 문제가 생기는 데다, 기중에는 기관사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 상황에 조

치를 취할 수 있는데, 대체 기관사들은 이런 노하우가 없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철도공사 사장은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철도 운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숙련 노동자 7천4백여 명이 빠진 자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근무를 해야 하

▶ 9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고, 심지어 필수공의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 참가자의 절반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최근 항의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근조 구로차량지부장에 따르면, 10월 14일 구로차량지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18일에도 차량지부들의 연합집회와 고양차량지부 집회를 열었다. 수원지구

조합원들은 철도대학 앞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해 달라고 호소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사측이 열 차례나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한 달 수임이 통째로 날아간 월급 명세서들 받아 들고도 아직까지 노동자들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철도 차량지부들은 대체인력에 항의하는 행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

다. 지부별 총회를 열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은 대체인력 반대 물자보를 착용하며, 지부별로 대체인력 항의 시위를 열기로 했다.

만일 항의 행동을 물리적 저지 행동으로 발전시켜 대체인력을 일파라도 철수시킬 수 있다면, 정부는 훨씬 큰 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조합원 4천~5천 명을 부산신항에 집결해 화물차 출입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세를 한층 높였다.

대체인력을 저지하고,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파업 대열 이탈을 막기 위한 활동인 '피켓팅'을 하는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위대한 전통이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피켓타인은 파업의 경제적 효과를 진정으로 높이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고무하는 등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거듭 입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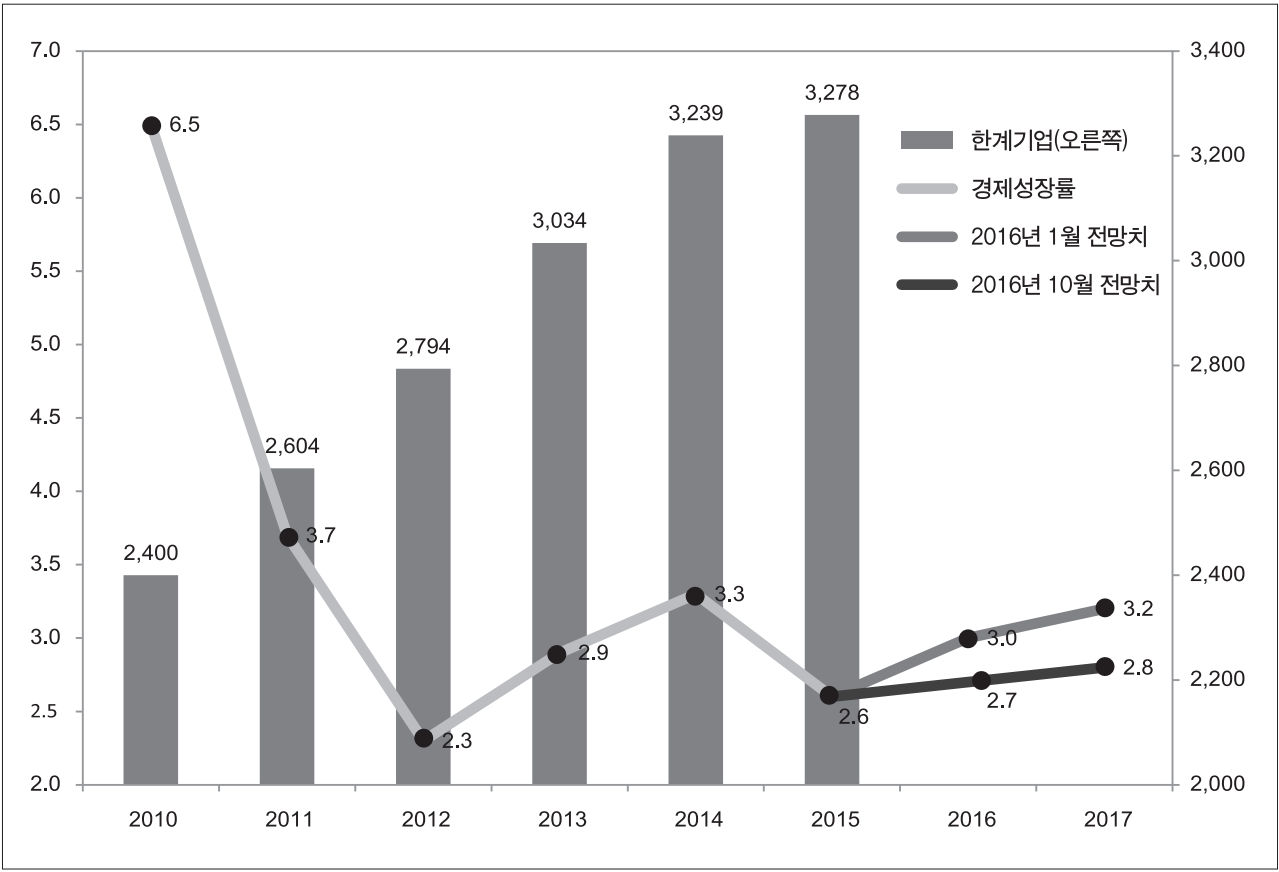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10월 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금리 인하를 언급해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 수장들 사이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그만큼 위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2.7퍼센트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생산 중단, 현대차와 화물연대·철도 파업,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부도 위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4퍼센트 감소했다. 낮은 이윤율 때문에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건설투자가 10퍼센트 증가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것도 가계부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해에 국내총생산이 72조 원 증가할 때 가계부채는 1백17조 원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은 3퍼센트였지만 가계부채는 4.5퍼센트 증가했다.

게다가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윤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재무 구조가 부실해 더한층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2010년 2천4백 곳이던 한계기업은 2015년에는 3천2백78곳으로, 37퍼센트 증가했



다. 한계기업 중 과거에도 한계기업이었던 만성적 한계기업도 2010년 1천6백46곳에서 지난해 2천4백74개로 늘었다. 최근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에서 한계기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상황도 한국경제에 불리하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6.7퍼센트)이 2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올 연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금리 인상 정책은

한국의 금리도 끌어올려 한계기업들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브렉시트 협상이 초래할 악영향도 감안해야 한다.

경기부양 논란

최근 한국 지배계급 내의 경기부양 논란은 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라는 두고 벌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추락하기 전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부는 이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0월 14일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은 경기를 후퇴시키는 재정충격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재정확대를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퍼센트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백15.2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므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다른 일부는 수출이 둔화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또 생겨난다면 재정 부실의 위험성이 급작스럽게 증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감의 반영이다.

한국 경제 앞에 놓인 위험 때문에 지배계급의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감축했고, 2017년 예산도 올해에 비해 짊짊 늘렸을 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지원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은 지원하지 않아 정책적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계의 불신은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세 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 한국 경제 상황은 내년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와 지배계급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셋째,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지배계급 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청와대를 둘러싼 부패와 추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때가 노동계급이 투쟁에 나서기 좋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정규

한진해운 법정관리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 운영권 매각을 결정했다.

미주 노선은 한진해운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한진해운은 아시아~미주 항로의 7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4~5위에 올라 있었다. 결국 미주노선 운영권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은 파산하거나 기껏해야 연근해를 운영하는 중소 해운업체가 될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미주 노선 인수에 나섰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을 세계 수위의 해운회사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말 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부터 돌던 ‘정부가 양대 해운회사(한진해운·현대상선)를 합치려 한다’는 소문이 현실이 됐다.

물론 이 합병 과정에서 ‘물류 대란’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지고 부산항의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 분명해지면서, 해운·항만업계 자본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 매출 가운

데 한국 상품 수출입 비중이 20퍼센트 밖에 안 돼, 법정관리로 가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진해운 선박들이 화물을 내리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바다에 고립돼 있으면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 추락을 우려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수출 물량의 40퍼센트와 20퍼센트를 한진해운에 맡겨 왔는데, 부랴부랴 다른 해운회사를 찾아 운송 비용이 급등하는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부산항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항만업계 자본가들의 불만도 커졌다. 한진해운은 부산항 물량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물건을 내리고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는 환적물량이 한진해운 전체 물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1백4만 TEU(1TEU는 6미터짜리 컨테이너 1개)였다. 부산항만공사는 한진해운 환적물량 중 절반인 50만 TEU가 중국 상하이 등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산항만업계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해도 4천4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정 우선순위

물론 정부는 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을 더 ‘매끄럽게’ 추진할 수도 있었다.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을 인수해 계속 운영하면서 현대상선과 합병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물류 대란’과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를 감수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이처럼 예상되는 피해와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은 공공부채 감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공공부채를 줄이려면 몇몇 산업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기업부채를 공공부채로 막아 주는 것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조선업 구조조정과 철강·정유·건설 구조조정 등에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주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삭감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2015년에 공공기관

총 부채를 16조 7천억 원 줄이는 등 최근 몇 년간 연속해서 공공부채를 감축한 것이나,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채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얼핏 보면 부채가 훨씬 큰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지원하면서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부채가 급증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진해운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익스포저(대출·투자금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손실 금액)는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반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익스포저는 22조 원이 넘고 이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익스포저만도 19조 원이 넘는다.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대우조선해양이 부도에 이르렀다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일시에 13조 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에 지원되는

자금은 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만, 한진해운에 지원되는 자금은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법정관리 여파로 이미 한진해운 미주·중국법인에서 4백 명이 해고됐고, 한진해운 본사 노동자 1천4백여 명의 상당수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 부산항 물량 감소로 항만업계 노동자 2천3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구조조정 산업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완강하게 노동자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선박과 설비를 늘려 온 기업주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대신 져야 할 까닭은 없다. 정부가 한진해운 같은 부도 기업을 영구 국유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하며 싸워야 할 일이다.

강동훈

중국 우칸촌

중국공산당은 어촌 주민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했다

2011년 부패한 공산당 서기를 몰아내고 주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 광둥성 우칸촌이 다시 전쟁터로 바뀌었다.

올해 6월 중순 우칸촌 주민들이 2011년에 부당하게 수용된 마을 토지를 돌려 달라며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차에 경찰이 린쭈렌 우칸촌 당서기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주민 3천5백여 명은 “우리 서기를 돌려 달라”, “우리 토지를 돌려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벌였다.

현지 검찰은 린쭈렌이 청부업자 선정과 자산 구매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를 믿는 주민은 거의 없다. 9월 13일 경찰 당국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주민 13명을 체포하려다 주민들이 저항하자 고무총과 최루탄을 이용해 강제 진압했다. 그리고 시위 가담자 70여 명을 체포했다. 10월 8일 광둥성 포산시 찬청구 인민법원이 린쭈렌에게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했지만 린쭈렌은 즉각 항소했다.

작은 어촌 마을인 우칸촌이 전쟁터가 된 이유는 2011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행정 당국과 공산당 간부는 우칸촌 토지를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넘기고 주민들에게는 쥐꼬리만한 토지 매각 보상금만 주려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토지 매

각은 불법이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빼앗기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주된 요구는 토지 강제수용 철회와 비리 간부 처벌이었다. 결국 중앙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주민 대표인 린쭈렌을 우칸촌 당서기로 인정했다.

분노

그런데 약속과 달리 토지는 반환되지 않았다. 게다가 주민 대표인 린쭈렌 당서기가 체포되자 우칸촌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중국 동남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은 산업 발전 덕분에 근교의 농촌을 흡수하면서 확장해 왔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는 역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칸촌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광저우와 둥관 등의 도시가 산업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그 주변의 우칸촌 등 농촌과 어촌이 개발 대상이 됐다.

도시가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고 불법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해마다 중국 농민 4백만 명이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기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칸촌 사례는 중국이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조차 무시되는 비민주적 사회임을,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님을 잘 보여 준다.

이정구



우칸촌 거리를 봉쇄한 시위진압 경찰.

Q&A 설명

집체 소유 토지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와 집체 소유로 나뉜다. 국가 소유는 중앙정부의 토지관리 부서가 소유한 경우를 뜻한다. 집체 소유는 지방 경제조직(향·진·촌)이 소유한 경우를 뜻한다. 즉, 그 경제 단위에 소속된 주민의 집단적 소유를 뜻한다. 중국 헌법과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농

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법률에 국가 소유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집체 소유다. 따라서 우칸촌의 토지는 집체 소유이므로, 우칸촌 주민들의 소유인 셈이다. 1978년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1998년의 주택 상품화 이후 도시의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지만, ‘토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매매·임대·저당할 수 있다. 즉, 토지 사용권은 토지의 점유·사용 수익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는 권리를 뜻한다.

2003년 중국 정부는 집체토지청부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집체 토지에 대한 농민 개인의 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촌의 집체 토지에 대한 상품화가 한발 진전된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조업이 집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었다.

2008년 중국은 경작지 감소 상황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강요(2006~2020)’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식량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경작지 18억 모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 때문에 도시 근교의 경작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 권리 옹호가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중국 정부

지난해 12월 중국 공안(경찰)에게 체포된 광둥성 노동운동 활동가 3명(펑페이양, 주샤오메이, 탕환싱)이, 구금 아홉 달 만인 지난달 26~28일 광저우 시 판위 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군중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이들과 함께 붙잡힌 멥한은 추가 조사를 핑계로 광저우 제1구치소에 수감된 채 이번 재판에서 빠졌다. 재판 결과 세 활동가는 각각 징역 1.5~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지난해 12월 광저우에서 활동가 50여 명이 체포돼 취조를 받았고, 그중 7명이 구금되거나 실종됐다. 구금된 7명은 오랫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며 변호사를 만날 수조차 없었다. 활동가 가족들도 계속되는 공안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

2015년 이래 중국에서는 인권 변호사, 여성 운동가, 노동운동가를 대량 검거하는 등 탄압이 잦아졌다.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올해 8월 인권 변호사 4명(저우스펑, 후스건, 거우홍귀, 자이옌민)이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죄목

으로 저마다 3~7년 징역형을 받았다. 9월 22일 베이징에서 활동가들을 방어하던 변호사 샤린이 사기죄로 12년 형에 처했다. 중국 법원은 중국공산당이 자행하는 정치 탄압의 도구가 돼 버렸다.

광저우 공안이 저지른 짓도 마찬가지였다. 공안은 정의를 짓밟고, 체포된 사람들의 기본 인권도 유린했으며, 실정법마저 심각하게 위반했다. 세계인권선언 11조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무죄 추정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4조 3항에는 변호인을 ‘스스로’ 선임하고 접견할 권리가 명시돼 있다. 게다가 중국 헌법 125조는 “피고인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 형사소송법 14·33조에도 “공안 기관은 소송 참여인한테 법에 따른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소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홍콩노총, 세계화감시, 중국노동자통신 등 홍콩의 많은 노동 단체들이 공개 성명을 발표해 광저우 활동가들을



중국 정부가 구금했던 광둥성 활동가들 왼쪽부터 펑페이양, 주샤오메이, 탕건(탕환싱), 멥한.

표적 단속한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법정에 선 활동가 3명은 모두 노동자 지원 엔지오(NGO)인 ‘판위농민공센터’의 주도적 일원이었다. 이 단체는 제조업 중심지인 광저우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해 노동자 대표 선출과 단체교섭 성사를 이끌었고, 때로는 기업주, 노동자, 지방정부 사이의 3자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4년 12월 판위 구에 있는 리데(利得) 신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 이전과 사회보험료 미지급에 맞서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판위농민공센터가 개입해 노동

자들이 보상금 1억여 위안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판위농민공센터는 광저우 노동자들에 평판이 아주 좋고, 중국 노사 간 집단교섭의 개척자로도 불린다.

당연히도 활동가들은 중국 공안에 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모진 탄압은 중국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른바 ‘사회주의’라고 자칭하는 중국이, 일부 진보·좌파들마저 모종의 ‘노동자 국가’나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대안’으로 여기는 중국이, 자기 ‘인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말과, 극심한 불평등이나 노동자 투쟁 탄압은 애당초 형용모순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노동자 투쟁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빗발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마트·청소·건설·보건 노동자들이 중국 곳곳에서 임금·노동조건 개선과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그중 “세계의 굴뚝”인 광저우가 단연 두드러지는데, 중국 경기가 후퇴해 공장 폐쇄, 정리해고,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널려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만으로 ‘국제적’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와 중화전국총공회(국영노조)의 탄압과 방해로 뚫고 전진하는 중국 노동자들과, 이들을 독립 노조로 조직하려 애쓰는 중국 활동가들한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아래서부터 분출된 이런 투쟁만이 중국 사회의 실체를 드러내고 중국의 변화를 앞당길 힘이 될 것이다.

이재권

왜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택했나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다. 그러자 인종 차별이 득세한 결과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권력층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발발 이후 영국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공격에 시달려 왔다. 영국노총(TUC) 자료를 보면, 2007~15년 OECD 나라들 중 실질임금이 영국만큼 많이 떨어진(10.4퍼센트) 곳은 그리스뿐이다. 반면, 영국 최상위 부자 1천 명의 재산은 갑절 이상으로 늘어 5천7백60억 파운드(1인당 평균 8천억 원)가 됐다.

이에 대한 반감에는 당연히 모순된 요소가 섞여 있고, 그것이 장차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상황을 반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세 가지 이유로 탈퇴에 투표하자고 주장

했다. 첫째, 유럽연합은 친자본주의 기구이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전역에 긴축을 강요했다. 둘째, 유럽연합은 이주민·난민에게 인종차별적이다. 유럽을 찾는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에 수장되고 있다. 셋째, 유럽연합은 제국주의 악당의 일원이자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나토와 함께 돕는 핵심 기구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40년대 이래로 유럽을 하나로 묶어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려고 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의 역사: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노동자 연대> 154호를 보시오.)

그래서 SWP는 몇몇 좌파단체,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함께 ‘좌파적 탈퇴’(렉시트) 운동을 벌였고, 인종차별에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반자본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원칙에 근거해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불법 이주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체포될 줄 아시오” 영국 총리 메이가 2013년 내무장관이던 시절 운행한 ‘공익광고 차량’의 문구.

탈퇴 투표의 실제 성향

여론조사 업체 애쉬크로프트는 투표 당일 전국 1만 2천3백69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애쉬크로프트는 설문 응답자를 다음과 같이 직업별로 분류했다.(하단 표 참조)

A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는 노동자가 많이 포함된다. 대학 강사, 교사, 보건 노동자 일부는 B에도 포함된다.

전류에 더 많이 투표한 집단은 A와 B뿐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탈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던 것이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3분의 2가량이 탈퇴에 표를 던졌다. 노동계급은 누적돼 온 쓰라림과 분노를 탈퇴 찬성 투표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잉글랜드에서는 런던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탈퇴가 더 많았다. 웨일스에서도 탈퇴가 더 많았다. 런던에서도 탈퇴에 투표한 사람은 1백50만 명을 넘었다. 지역을 더 세분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대처 정부의 공격을 많이 당한 곳일수록 탈퇴 투표 비율이 높아 60~70퍼센트에 달했다.

한편, 대학생 유권자의 87퍼센트가 투표했는데 그중 85퍼센트는 전류에 투표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난민·이주민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모종의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영국독립당 같은 반동적 세력을 견제하려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은 청년들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해 투표한 것이고,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관여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이다.

탈퇴 투표자의 절반은 “영국에 관한 결정은 영국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단연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국경 통제”를 이유로 꼽은 사람은 3분의 1에 그쳤다. 인종차별적 동기보다 유럽연합의 엘리트주의적 비민주성에 대한 반감이 더 컸던 것이다.

이주민에 관한 의견 분포는 다루기가 까다롭다. 탈퇴 투표자의 14퍼센트만이 이주민을 긍정적으로 여겼고 62퍼센트는 부정적으로 여겼다. 전류 투표자는 긍정 57퍼센트, 부정 17퍼센트였다. 이는 앞에서 본 사회계층 중 가장 하위인 C2, D, E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상위 계층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것과 관계 있다.

이런 결과는 사회주의자들 앞에 엄중한 과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원인을 보통 사람들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이주민 유입에 반대하는 여론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크게 늘었고 2003년 이후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2016 영국인들의 사회 인식 조사〉)

수십 년 동안 주요 정당과 언론은 이주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임금이 떨어지고, 공공서비스가 망가진다고 선동했다. 지배자들은 개인주의를 부추긴다. 그래서 삶을 개선하려면 (집단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말고) 바로 옆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친다. 인종차별도 그런 식으로 부추긴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민투표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전류 진영과 탈퇴 진영 모두에서 설쳤다.

그런데도 무수한 대중이 여전히 인종차별을 거부한다는 점이 진정 놀랍다. 2015년 9월의 여론조사는 영국인 셋 중 한 명이 난민 구호 기금 모금과 연대 활동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모리가 올해 7월 발표한 이주민에 관한 국제적 인식 결과를 봐도 영국인은 35퍼센트가 이주민에게 우호적이었다. 조사 대상 22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고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었다. 영국 노동자는 대부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탈퇴 투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영국 독립당이 부상하리라곤 봤지만 현실은 달랐다. 영국독립당은 국민투표 이후 보궐선거가 치러진 20곳 중 11곳에서 득표율이 떨어졌고 오직 한 곳에서만 득표율이 올랐다.(나머지 8곳은 새로 출마한 곳이었다.) 백슬리세인트미카엘 선거구에서는 국민투표 1주일 뒤에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유럽연합 탈퇴 표가 63퍼센트가 나온 이곳에서 영국독립당의 득표율은 지난번보다 15퍼센트가 줄었다.

영국 파시스트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주말에 뉴캐슬에서 있었던 나치 집회에는 전국에서 나치 동조자 겨우 스무 명이 모였다. 3백 명에 달하는 반파시스트 시위대가 “난민 환영한다”, “나치 꺼져라”라는 구호로 그들을 압도했다. 결국 파시스트들은 세 시간 만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7월 사우스햄튼에서도 ‘16명 vs. 1천 명’으로 반파시스트 시위대가 승리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파시스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인상에 불과한 견해일 뿐 아니라 그들을 막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의 모순된 의식에 개입하기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노동자들의 반(反)권력층 정서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려면 노동자들의 모순된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각각의 노동자가 “두 가지 이론적 의식 (또는 한 가지 모순된 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의식(또는 모순된 의식의 한 측면)은 노동자의 실천 속에 잠재해 있고 그가 다른 노동자와 협력하게 해 준다. 둘째 의식(또는 모순된 의식의 반대 측면)은 노동자가 지배계급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생긴 것이다.

개인적 경험

투표 직전에 실시된 입소스모리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모순된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유권자의 42퍼센트, 탈퇴 투표 의향자의 65퍼센트가 이주민은 영국 사회 전체로 보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그런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 국한된 영향을 물었을 때는 부정적 응답이 24퍼센트로 톱 떨어졌다. 탈퇴 투표 의향자의 절반가량은 이주민이 자기 동네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아가, 개인적 경험을 물었을 때는 유권자의 78퍼센트, 탈퇴 투표 의향자의 62퍼센트가 이주민이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거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체로 언론

과 정치인들이 떠드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단연 가장 좋은 방법은 투쟁에 참가하는 것이다. 커다란 파업이 벌어지면 노동자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지로 보게 된다. 반면, 파업이 적을수록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생각들이 퍼지기가 더 쉽다.

인종차별은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유럽인들의 권리나 유럽인들이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자유를 빼앗거나 억누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전선 ‘인종차별에 맞서자’(Stand Up to Racism)를 통해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난민을 환영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영국 정치는 이번의 연속이었다. 영국독립당이 수백만 표를 얻으며 떠올랐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 투표가 치러지면서 스코틀랜드국민당이 떠오른 반면 노동당은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붕괴했다. 이후 제러미 코빈이 긴축 반대 정서에 힘입어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어 노동당 대표가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번이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이번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 글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2016년 가을 호에 실린 찰리 김버의 ‘Why did Britain vote Leave?’를 기초로 김종환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찰리 김버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기관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다.

사회 계층에 따른 탈퇴 투표 비율(출처: 애쉬크로프트)			
계층	인구 비율 (퍼센트)	탈퇴 투표 비율 (퍼센트)	
A: 경영·관리·전문직(상층)	4	A+B: 43	
B: 경영·관리·전문직(중급)	23		
C1: 감독직, 사무직, 경영·관리·전문직(하급)	27	C1: 51	
C2: 숙련 육체 노동자	21	C2: 64	
D: 반숙련 또는 미숙련 육체 노동자	16	D+E: 64	
E: 연금 생활자, 일용직 노동자, 사회 부조에 의존하는 실업자	9		

유럽의 정치 양극화 — 중도가 흔들린다

차승일

유럽 정치가 어지럽다. 9월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9월 24일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에서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재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노동당 우파가 코빈을 밀어내려 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다시 치러진 것이다. 그러나 코빈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유세를 펼치며 압승을 거뒀다. 노동당 당원도 부쩍 늘어 이제는 55만 명이다. 1980년대 이래 최고치다. 올해에만 16만 명이 증가했다.

반면 대서양 너머 독일에서는 우익이 성장했다. 9월 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州), 18일 베를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된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이 큰 성공을 거뒀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은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시작했지만 파시스트들이 주도권을 발휘해 가고 있는 정당이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은 메클렌부르

크-포어포메른 주에서 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CDU)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베를린에서는 14퍼센트를 득표하며 지방의원 25석(전체 1백60석)을 확보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둘 듯하다.

주류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베를린에서는 급진좌파인 디링케(좌파당)의 선전도 봐야 한다. 베를린에서 디링케는 15.6퍼센트를 득표해 27석을 차지했다. 베를린 동부 선거구들에서는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노동자와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베를린 북부 노이쾰른 선거구에서는 득표율이 갑절 이상으로 뛰어 20퍼센트 이상을 득표했다. 물론 독일 전체를 보면 디링케보다는 독일을위한대안당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다.

유럽 정치 양극화의 근저에는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가 있다. 최근 벌어진 도이체방크 위기는 유럽 내 최대 경제인 독일 경제도 더는 안심할 수 없음을 보여 줬다.



10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종차별에 맞서 일어서라’ 총회에서 연설하는 제러미 코빈.

경제 위기, 중도계 주류 정당의 추락, 난민 위기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인 주류 정당들의 지지가 서서히 침식돼 왔다. 둘 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며 노동자를 공격해 나타난 현상이다. 경제 위기 발발 이후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모두 긴축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중도계 주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급진좌파와 우익이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중도우파 국민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의 득표율 합이 70~80퍼센트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5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그리스의 중도좌파 사회당은 2009년에는 단독으로 44퍼센트를 득표해 집권했지만, 이제는

5~6퍼센트 득표하는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난민 위기가 유럽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럽 난민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세계적·지역적 열강이 시리아에서 각축전을 벌이며 내전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유럽 각국 지배자들은 공동으로는 난민 유입을 막으려 하는 동시에 서로 부담을 떠넘기려 해 갈등을 빚는다. 각국 국경에 장벽과 검문소가 설치되면서 유럽 통합 구상이 무너지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이 난민 유입을 막으며 동원하는 이민자(특히 무슬림) 배치 이데올로기는 우익을 성장시키는 좋은 거름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난민과 이민자를 환영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도 일어

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유럽 전역에서 수천~수만 명에 이르는 난민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영국 코빈의 부상에도 한 몫했다.

요컨대, 과거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정치 구조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중도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 정치가 각종 모순과 불안정, 급격한 전환을 보이는 가운데 6월 23일에는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브렉시트를 “세계사적 전환”이라고 불렀다.(관련 기사: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노동자 연대〉 179호) 그만큼 앞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정치에 큰 불안정을 낳을 사건인 것이다.

우익이 양극화의 수혜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

양극화가 표현되는 양상은 다양하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급진좌파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우익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다.

영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독립당(Ukip)이라는 우익 포퓰리스트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이제는 제러미 코빈의 부상으로 좌파 개혁주의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전체를 보면 우익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다. 우익의 주된 무기는 유럽연합 비판과 무슬림 혐오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국민전선(FN) 같은 극우파가 있다. 국민전선은 ‘유로파시즘’으로 분류된다. 유로파시즘은

파시즘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점잖은 정치인 행세를 한다. 하지만 궁극으로는 선거에서 거둔 성공을 이용해 거리 전투 조직을 만들어 노동계급을 원자화시킨다는 파시즘의 목표를 갖고 있다.

원자화

국민전선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다가 급기야 2015년 12월 지방선거에서는 27.7퍼센트를 득표했다. 낮은 투표율을 고려해도, 전체 유권자의 7분의 1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대안당이 약진하고 있다. 개혁

주의자들이 대안적 모델로 여기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스웨덴민주당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당명의 파시스트 정당의 득표율이 2006년 2.9퍼센트에서 2010년 5.7퍼센트로, 2014년에는 12.9퍼센트로 증가했다.

헝가리에서는 준군사조직까지 보유한 파시스트 정당 요빅당(‘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의 지지율이 2006년 2.7퍼센트에서 2010년 16.7퍼센트로, 2014년에는 20.2퍼센트로 경총 뛰었다.

그리스에서는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이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7퍼센트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급 투쟁의 뒷받침이 부족한 급진화

중도계 주류 정당들의 지지율 하락을 주로 우익이 매우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유럽 노동계급 투쟁의 전진이 더디다는 약점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은 패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급진좌파, 특히 혁명적 좌파의 성장을 제약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물론 곳곳에서 대단한 투쟁이 벌어졌다. 2011년과 2014년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만 명 이상이 긴축 반대 파업을 벌였다. 올해 4~7월 프랑스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을 벌였다. 이런 투쟁들은 좌파 일각의 인상론적 속단과 달리 노동계급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은 아직 대체로 수세적이고, 결정적으로 노동조

합 관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노조 관료의 배신 → 패배 → 현장조합원 사기 저하 → 노조 관료의 영향력 강화’라는 악순환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예외는 그리스다.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총파업은 30차례 이상 일어나며 정부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사회를 좌경화시켰다. 그 덕분에 시리자가 집권할 수 있었다. 그리스의 노조 관료들이 유달리 투쟁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투쟁을 꺼렸다. 반자본주의적 좌파가 뿌리 내린 교원노조의 한 지부에서부터 시작된 투쟁이 확산되며 총연맹급 대형 노조들까지 움직였다. 2010년 5월의 첫 총파업은 그 결과였다.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모순, 불안정, 급격한 전환이 특징인 유럽 정치 위기가 계속해서 투쟁을 낳을 것 같다. 관건은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 악순환을 끊을 만큼 노동계급 투쟁이 전진할 수 있느냐이고 그리스 경험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혁명적 좌파의 효과적 관여이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대중 항의 물결이 일어, 낙태를 일절 금지하려는 우파 정부의 시도를 꺾었다. 이 투쟁이 성장하는 데서도 혁명가들의 기여가 결정적으

로 중요했다.

이처럼 혁명적 좌파가 대안이 돼 효과적으로 운동에 관여하면, 중도계 주류 정당들의 지지율 하락이 우익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유럽의 혁명적 좌파가 “이데올로기의 명료함, 정치적 응집력, 특히 독립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혁명적 좌파에게도 매우 중요한 듯하다.

필리핀

두테르테는 반동적 우파 엘리트 정치인

자이 자일스 웡파콘 타이 사회주의자

이 글을 쓴 자일스 자이 웡파콘은 타이의 사회주의자로, 현재 영국 망명 중이다. 웡파콘은 타이 군부의 2006년 친왕정 쿠데타를 비판한 일 때문에 국왕모독죄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다. 망명 전 타이 출라롱콘대학교 교수였고, 타이 정치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주도적 활동가였다. 이 글은 두테르테 당선 즈음인 5월 22일에 쓰였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삽입한 것이다.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의 '최고 권력자'이자 강패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두테르테는 시장 시절 잡범 수천 명을 즉결처형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전력이 있다. 희생자들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는 경찰과 용병, 과거의 공산반군 등으로 이 살인부대를 꾸렸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2006년 폐기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범죄자”들을 교수형에 처해 그들의 목이 몸통에서 떨어질 때까지 매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두테르테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1989년 다바오 교도소 폭동 사건 때 강간·살해된 오스트레일리아인 여성 선교사에 대해 그는 농담조로 “시장인 내가 먼저 강간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두테르테는 노동자와 빈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포퓰리스트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반동적 우파 정치인이다. 그는 마오주의 필리핀공산당(CPP)에게 환경, 농촌 개발,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각료 자리들을 맡기겠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사회의 후진 부위(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중간계급 포함)의 지지를 얻으려고 자신이 “강력한 지도



필리핀 노동계급의 적, 대통령 두테르테.

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는 여성비하 발언을 늘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온갖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뒤섞는 이유는 그에게 이데올로기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원칙도 없다.

두테르테가 공산당에 추파를 던지자 공산당 창립자인 호세 마리아 시손이 화답했다. 시손은 이제 공산당이 정부와 화해할 때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공산당은 진보적 세력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들의 마오주의는 기껏해야 권위주의적 스탈린주의와 민족주의였을 뿐이다. 그들도 여타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들과 마찬가지로 계급 분단을 가로질러 부르주아 정치인과 동맹을 형성하는 데 목을 맨다. 현재 중국과 네팔의 “마오주의” 공산당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두테르테가 허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산당원을 각료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보적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이후 농업개혁부와 사회복지부에 공산당 계열의 인물 2명이 장관으로 임명됐다.] 필리핀에서

는 과거에도 좌파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던 선례가 있다. 마르코스 독재가 [1986년] 민중항쟁으로 몰락한 뒤 출범한 코라손 아키노 정부는,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5월1일운동(KMU)’ 노동조합연맹의 투사 아우구스토 산체스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대중이 좌파라고 여기는 인물이 부르주아 정치에서 각료로 임명되는 경우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다. 목적이 달성되면 좌파 각료는 제거된다. 산체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다.

두테르테 당선 전, 비(非)스탈린주의 좌파정당인 ‘노동대중당(PLM)’의 소니 멜렌시오는 사회주의자는 유력 대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지지할 수 없다고 썼다.

두테르테의 주요 경쟁자는 전임 대통령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를 배출한 자유당의 후보였다. 멜렌시오가 지적하듯이 두테르테의 당선은 “프라쑤(더러운 걸레)”로 불리는 기성 정치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보여 준다. 평범한 노동자와 빈민의 삶에 기여한 게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테르

테는 좌파적 대안이 부족한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멜렌시오는 두테르테가 후안 페론을 일부 연상시킨다고 한다. 후안 페론은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스트 독재자로서 좌우를 망라하는 동맹을 건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테르테가 페론처럼 국가를 통해 사회적합의주의를 관철시킬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멜렌시오는 두테르테가 ‘아웃사이드’라는 생각을 옹기 둠으로써 두테르테는 오랫동안 민다나오섬을 지배한 지역 정치 엘리트 가문 출신이다.

한편, 멜렌시오가 두테르테를 타이의 [전 총리] 탁신 친나왓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다. 둘 다 인권 탄압을 자행했고, 탁신 역시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수천 명을 즉결 처형 했다. 둘 다 한때 마오주의였던 세력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탁신은 지역 강패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처럼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 빈민 정책들을 도입한 부유한 재계 거물이었다.

이처럼 두테르테와 탁신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선거 후 멜렌시오의 ‘노동대중당’이 두테르테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멜렌시오는 이 강패와 그 지지자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그는 기성 엘리트 “프라쑤” 정당들이 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테르테도 노동자의 주적이다. 멜렌시오는 좌파가 두테르테 지지자들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테르테와 동맹을 맺자는 호세 마리아 시손의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좌파는 부르주아 정치인들, 하물며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과는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좌파는 복지국가 건설, 노동조합 권리 확대, 국가 탄압 종식 등 진정한 대안 강령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타이에서 탁신 정부 시절 우리 ‘노동자 민주주의’가 했던 일이다.

물론, 좌파는 주류 정당들이나 군부가 [탁신이나 두테르테를 몰아내고 전통적 엘리트층을 복권시키려고] 벌이는 모든 쿠데타 시도에 맞서야 한다. 만약 쿠데타가 발생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운동이 크게 벌어진다면 두테르테 지지자들과도 함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이에서 ‘노동자민주주의’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중 운동] 붉은 셔츠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탁신과 그를 지지하는 붉은 셔츠 공식 지도부한테서 독립성을 유지했다.

하물며 지금은 좌파가 두테르테와 어떤 종류의 동맹을 맺을 시기도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동남아시아의 좌파는 권력에 더 빠르게 다가가려고 계급 분단을 가로지르는 동맹을 건설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필리핀의 비(非)스탈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타이의 ‘노동자민주주의’보다 더 강하고 영향력도 더 크다. 이런 필리핀 사회주의자들이 한층 더욱 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낭비한다면 애석한 일이 될 것이다.

출처 자이 자일스 웡파콘 블로그 5월 22일자 번역 최민혁

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스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놔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는 쿠르반에 연대하려고 일손을 놓는다. 쿠르반은 지난 5년간 우리와 함께 회사를 일궈 왔다. 쿠르반은 자립적으로 생계를 꾸렸고,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 당국이 올해 10월 1일자로 노동 허가를 만료시켜 지금 추

방 위험 속에 살고 있다. … 우리는 당국이 쿠르반에게 정식 여권과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

한다!”

이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12만여 명이 공유했고 〈슈피겔〉 독일



“우리는 타뷔스 쿠르반과 함께한다” 동료 난민 노동자의 추방을 막으려고 행동에 나선 독일 건설 노동자들.

어판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독일과 유럽의 모습”이라면서 지지 메시지를 남겼다. 사측도 숙련 노동자인 쿠르반 추방에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17일 현재, 쿠르반의 거취에 관해 발표된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처럼 일부 노동자들이 난민을 방어하려고 모범적으로 행동한 것과 달리, 독일 지배자들은 오히려 난민을 최소로 수용하려고 난민 일부를 추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총리 메르켈은 지난달 이렇게 말했다. “유럽에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은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난민 기준에 부합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난민 인정률은 유럽연합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천신만고 끝에 독일을 찾은 난민들의 신분이 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난민 인정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메르켈의 말대로라면 이런 협약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배자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행동만이 난민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다.

김종환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자본주의적 경쟁이 낳은 최근의 사고

삼성전자 핸드폰 갤럭시 노트7에서 폭발 사고 수백 건이 벌어진 끝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 일로 삼성전자는 기회 손실까지 따져 7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삼성은 폭발 사고 초기에 배터리 결함이라며 제품을 리콜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배터리를 교체한 제품에서도 발화·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통신사와 판매업자들이 판매를 중단하자, 삼성도 어쩔 수 없이 판매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발은 갤럭시 노트7에 들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일어났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 전지이지만, 열이나 큰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UPS 화물항공기가 화물칸에 실린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추락했다. 2011년 제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747 화물기도 리튬이온배터리 사고로 추정된다. 비행기 탑승 시 위탁 수화물 금지 목록에 핸드폰 보조배터리가 있는 것도 화재 위험 때문이다.

따라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업들로서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번 사고는 삼성전자가 애플, 화웨이 등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에 갤럭시 노트7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급하게 시장에 내놓아 벌어진 일로 보인다.



과연 사고는 여기서 끝? 이윤 우선 논리는 이런 사고를 재발시킬 수 있다.

애플이 아이폰6를 출시한 2014년 4분기에 삼성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애플에게 내줬다. 2015년에 다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지만, 점유율은 전해에 비해 1.9퍼센트 낮은 수치

였다. 같은 시기 애플은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고, 중국 화웨이의 점유율은 5.7퍼센트에서 7.4퍼센트로 증가했다. 2014년까지 중국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던 삼성은 2015년부터 5위 밖으

로 밀려났다.

순이익은 더 줄었다. 2015년 1분기에 삼성 점유율 24.4퍼센트였지만, 출하량은 전년 대비 6.2퍼센트 감소했고, 순이익은 39퍼센트나 폭락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애플 신제품이 출시되는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2015년에 갤럭시 노트5를 아이폰6S보다 한발 빨리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는 수법을 썼다.

이번에도 삼성은 애플 신제품 아이폰7이 나오기 전에 노트7을 최대한 많이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했다. “삼성의 2016년 모토는 ‘선점’이다” 하는 말까지 나왔다. 하루라도 빨리 출시하는 것이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전성 검증은 후순위로 밀렸을 법하다.

한국 정부도 삼성전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다. 안전인증시험은 배터리 제품사양에서 허용한 충전 온도 범위 내 안전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발 때문에 해외에서 비행기 객실 내 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있을 때, 국토부는 “삼성전자 측 설명을 들어보니 기내 반입을 금지할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방치했다.

주류 언론은 삼성의 “글로벌 문화와는 동떨어진 조직문화, 관료주의 의사결정” 등을 탓하지만, 이런 사고는 삼

성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글로벌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HP는 2009~11년까지 노트북 배터리를 30만 대 리콜했고, 소니에너지디바이스도 2006년 배터리 9백60만 개를 리콜했다. 노키아도 2008년 휴대폰 배터리 리콜로 1조 원 이상이 들었다.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완결성이나 안전보다 시장 점유율, 원가 절감, 대용량 배터리 경쟁에 돌입하면서 폭발·발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개별 기업의 부도덕 때문에 벌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경쟁과 이윤이 문제라 아니라면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개별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독점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특허들 - 고체전해질로 된 2차 전지 특허는 토요타가 24건(10.9퍼센트), 히타치 10건(4.6퍼센트), 소니 8건(3.7퍼센트), LG 화학 7건(3.2퍼센트) - 을 개별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경쟁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장한빛

법원 노동자 사망률이 경찰보다 높은 이유

2010년 이래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10여 명씩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다. 법원 노동자들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경찰보다 사망률이 높다.(2016년 인사혁신통계연보)

진상조사에 제출한 한 의견을 보면, 법원 노동자들의 죽음은 대체로 “과도한 업무 강도에 따른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빚어낸 사고사”이거나 “급격한 업무 변화에 따른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빚어낸 사고사”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바로는, 법원 노동자들은 “국민 일반 수준보다 높은 자살률(최고 7배), 공무원 전체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봐도, 법원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꽤 많



법원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이 않고 있고, 법원 업무 특성상 사건 기한에 대한 부담으로 수면 장애가 심하다.(2014년 ‘법원 공무원 근무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

전임 대법원장 이용훈이 취임한 2005년부터 법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강해졌다. 이용훈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력 충원 없이 여러 제도를 도입했고, 그에 따라 하위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노동자들은 계속 이어지는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계속 사망하는데 원인 규명도 대책 마련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유약한 성격이나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죽음을 단지 개인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조합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의 대응이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투쟁 계획을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내야 한다. 법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인력 충원 없는 노동강도 강화가 낳은 결과다. 따라서 인력 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양윤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

노동자연대 지회 공개모임

강원충북 지회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1949년 중국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일시:10월24일(월) 오후 7시
장소:민주노동 제천단양지부 소회의실
연사:이재권 (노동자연대 활동가)
문의:010-3328-9853

인천지회
재벌개혁론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 강동훈(《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 10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노동희망발전연구소(부평구청역 7번 출구 인근, 청천도서관 맞은편)
참가비 : 2,000원
문의 : 010-2816-7181

서울 동부 1지회
낙태,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연사: 이현주(《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1월 3일(목) 오후 8시
장소: 모임전문공간 '다움' (건대입구역1번 출구 직진 국민은행 옆)
참가비: 4,000원(학생 3,000원)/음료 무료
문의: 010-8308-2177

서울 북부지회
미르, K스포츠, 승마입학... 왜 이다지도 부패할까? —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연사: 김문성(《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1월 3일(목) 오후 8시
장소: 전교조 서울초등중부성북지회 사무실 (길음역 9번 출구에서 200m, 길음 2동 주민센터 앞 건물 2층)
참가비 : 2,000원(장소 대여료)
문의 : 010-9867-2252

서울 동부2 지회
낙태,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연사: 이현주(《노동자 연대》 기자)
일시: 11월 4일(금) 오후 8시
장소: 이제마스터다카페 스튜디오 (회기역 1번 출구, 회기사거리에서 외대 방향 30m, 빌리엄 오피스텔 2층)
참가비: 4,000원(학생 3,000원)/음료 무료
문의: 010-4670-1392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5만 원 이상 ()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조선업 빅3 최대 5만~6만 명 감원 계획!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박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지배자들의 내분이 첨예하다. 최근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기본 방향을 제시한 맥킨지 보고서 초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한 것으로, 8월에 초안이 작성됐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로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내용을 조율하는 와중에 누군가의 누출(심증팔구 대우조선 부도를 바라는 쪽)로 언론에 흘러나왔다.

맥킨지 보고서 초안은 한국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빅3 체제에서 대우조선을 뺀 빅2 체제로 재편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조선을 갈갈이 쪼개고 그중 해양플랜트 사업을 청산하자는 것으로, 일명 “대우조선 회생 불가 보고서”로 불린다.

당연히 대우조선 측은 이 보고서에 강력 반발한 반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내심 반겼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에 국책은행 자금 15조 원이 물려 있고 4만 명의 고용이 달려 있다는 점을 들어 ‘대우조선 회생’을 주장했다. 2018년부터 조선업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클락슨(영국의 조선·해양업 전망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그때까지 버티자는 것이다. 조선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반대였다. ‘당장의 파장이 무섭다고 해서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맥킨지 편을 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대우조선은 공중분해 대상이 아니”라며 당분간 빅3 체제를 유지하자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물류대란 사태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부도나서 벌어질 파장을 우려한 것이다. 그만큼 대우조선이 한진해운보다 부채 규모도, 고용 규모도 훨씬 크다. 상황 통제력이 최근 크게 약화된 박근혜 정부가 그런 사태를 감당하기는 벅찼을 것이다.

일단 정부는 대우조선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세계 2위 조선업체의 부도까지 거론된 이번 논란은 구조조정 방향을 둘러싸고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날카롭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 줬다.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끝이 아니고 위기가 더 큰 기업으로 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사건이었다.

대우조선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끝난 게 아니다. 첫째, 조선업이 2018년



노동자들은 위기에 책임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의기투합한 정부·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도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10월 18일 조선 하청 노동자 대행진 선포대회

에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어긋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클락슨은 앞으로 몇 년 뒤엔 각종 환경 규제로 대규모 선박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추락하면 이런 규제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둘째, 대우조선이 2018년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우조선의 급한 불을 끄려고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의 미집행 자금 일부를 연내에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올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내년부터 갚아야 할 채권 만기가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흑독한

그래서 대우조선 측은 그동안 제출했던 자구안보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흑독한 고통을 뜻한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 1천 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공고했고, 올해 안에 분사화로 2천 명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내외 자회사 14개를 모두 매각하고 도크 2개를 줄이는 등 생산 능력의 30퍼센트를 축소하겠다는 자구안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알짜배기 사업부인 특수선 부문을 분할하는 계획도 포함되는데,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는 조선업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 5조 원 규모의 전기전자, 건설장비 부문을 분사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지원부서를 시작으로 분사와 추진에 속도를 내 왔는데, 아예 조선·해양플랜트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무려 정규직 인력 7천~8천 명이 비정규직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빅3에서만 정규직 1만 명, 비정규직까

지 포함하면 5만~6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인들은 어느 기업을 죽이고 어느 기업을 살릴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지만,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데서는 단단히 의기투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조선업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광기 어린 이윤경쟁 속에서 비효율과 적자를 늘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아 오면서 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정부와 사용자들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이틀간 7시간 파업을 벌여 저항 의지가 있음을 보여 줬다. 박근혜가 정치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상황을 이용해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10월 29일 거제에서 “힘내라, 조선 하청 노동자” 행진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와 임금체불 등에 고통받는 상황에서, 10월 29일 조선소들이 밀집된 거제에서 ‘조선 하청 노동자 대행진’이 열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비롯해 61개 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조선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과 서울 등지에서 희망버스를 조직해 참가할 계획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가 정치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야5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민주당, 국민의당)도 이 행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지역의 하청 노동자들은 매우 소수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체불 등에 집단적으로 항의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대우조선노조와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정규직 노조들이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든든한 우산이 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지키기도 벅차다’거나 ‘하청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도 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저임금에 내몰릴수록 정규직의 조건도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더구나 같은 일터에서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때 정규직의 투쟁도 힘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10-29 조선하청노동자 대행진

일시: 10월 29일(토) 오후 3시

장소: 거제 아수공설운동장

※ 오전 9시 서울 대韩문에서 희망버스 출발

